

‘국민연금 개혁’ 험로 예고… 민주 “정부안 반대”

야 “노후소득 보장 불안”
진성준 “세대간 갈라치기”
특위 제안에 “이율배반적”
한동훈 “모수개혁부터 완료”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과 기금 재정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더 내고 덜 받는 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반대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야당 간사 등은 “복잡해 보이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고 보험료를(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연금개혁안은 국회를 통해 입법이 돼야 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40%에서 42%로 오른 것에 대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 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 월 66만원을 받게 되어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입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인상 기간에 차등을 둔 것에 대해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겐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

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제안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안 관철을 위한 국회 특위를 지금 시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종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위 구성 제안이 이율배반적”이라며 “국회 연

금특위가 어렵게 협의한 안을 거의 짓밟는 수준의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은타임”이라며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래야 이번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 그리고 정부가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여순사건특위, 검정 교과서 반란 표현 삭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문수)는 5일 여순사건에 대한 교과서 왜곡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규탄하며 교과서 내용의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곧 한국사 교과서 선정 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여순사건을 왜곡한 교과서를 선택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총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이 여순사건에 대한 서술을 ‘반군’, ‘반란 폭도’, ‘반란 세력’ 등의 용어로 표현한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한국사 교과서는 △씨마스 △동아

출판 △리베르 △비상교육, 그리고 뉴라이트 교과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2021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정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균형 있는 역사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지난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 대상자가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임명하도록 해 진실화해위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불편부담이 없는 공정한 조사를 담보하고자 발의됐다.

또 2025년 5월 26일로 종료되는 진실화해위의 조사기간을 2027년 5월 26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 2022년 12월 9일 종



료됐던 진실규명 신청기간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일부 직원들로 인해 진실화해위의 정당성까지 부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진실화해위 구성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진실화해위의 정당성 회복을 전제로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의 연장조 소멸시효의 문제를 해결해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국힘, 10·16 재보궐선거 전남도당 공관위 구성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화진(사진) 전남도당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하는 10·16 재보궐선거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군수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 안도 의결했다.

공천 심사서에서 당원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국민 여론조사 40%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민심 반영을 위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에게 맡겼다.



정당소위원장과 정치소위원장은 각각 정성국·김재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고동진 의원을 비롯해 이행숙(인천 서구병)·이종철(서울 성북갑)·이창근(경기 하남을)·박상수(인천 서구갑)·서정현(경기 안산을)·김준호(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과 김경동 K-편당파트너스 대표, 김지나 공인노무사 등 12명이 합류했다.

특위는 다음주 1차 회의를 열고 운영방안과 중점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동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치고 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대안어머니 동구지회 등 12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5일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추방, 폭력예방을 외

김양배 기자

추경호,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의원 윤리실천법도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민생협의체·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 빨리 구성하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

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의 제정을 제안한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주장했다.

상속세·증합부동산세(증부세) 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그는 금투세를 놓고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고, 증부세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후·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 ‘지역화폐법’ 행안위 처리… 與 “현금 살포 의무화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8명 반대로 지역화폐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

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 재정이 어려워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며 “지역화폐는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

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야당은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이달 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자치 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